

“대기업 지방 투자유치, ‘5극3특’ 균형성장 마중물 될 것”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

김경수 위원장 “대기업 투자 통해 권역별 전략산업·성장엔진 육성 5종 패키지 통해 지방 투자 유도 고등인재 양성기관, 규제완화 필요 메가 특구로 매력적인 투자처 조성”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보고회를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주체로 ‘대기업’을 꼽았다. 정부의 패키지 혜택으로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이끌어내고, 기업이 지방의 산업, 학계와 시너지 효과를 내 인재 양성과 지역 경제 부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폐해 심각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 과제로 자리 잡은 이유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기반으로 한 성장이 한계에 부딪혔고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 비중은 이미 지난 2019년에 50%를 넘었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절반 가량이 수도권에서 나온다. 국내 500대 기업의 55%, 100대 기업의 약 8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국가 R&D 투자와 벤처 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과밀 현상이 두드러진다. 주요 경제 활동 인구인 30대 이하 청년들이 지난해에만 6만6000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했고, 40대 이상은 2만



이재명 대통령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뉴시스

1000명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과 동남권 양축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산업화 시기, IT(정보기술)와 벤처 중심으로 민간 중심의 수도권 투자가 집중됐던 정보화 시대를 넘어 3세대 AI(인공지능)·기후위기 시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 지역 경제 살릴 ‘대기업 투자’ 강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 발전 전략에 힘을 실으면서 대기업의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역 경제 부흥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권역별로 대기업의 투자를 통해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인 미래 산업과 첨단 사업, 대기업의 투자 유치를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에 각종 패키지 혜택을 줘서 지방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며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인재양성, 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그런 기업

에 과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 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주요 대기업은 국내에 14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다”며 “대기업의 1400조원 국내 투자를 5극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1400조원의 투자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에 함께 투자를 해서 인재 양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 고급 인재 육성에 스타트업 진흥까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기업의 지방 투자가 지역의 산업과 학계와 연계해 창업

활성화와 스타트업 진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대기업의 지역 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인재”라며 “지방에 투자하고 싶어도 미래·첨단 산업의 경우 직원 절반 이상이 석·박사급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을 뽑아야 한다”고 한다. 이어 “수도권이 아니면 미래, 첨단 산업 인재를 뽑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기업의 이야기”라며 “지방에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균형 성장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과제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전국의 4개의 과학기술원, 포스텍, 한전공대의 예를 들며 충분히 역량 있는 고등 인재 양성 기관을 키워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실현하게 할 ‘규제 완화’에도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 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요구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규제 문제”라며 “특히, 첨단 사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의 크고 작은 규제 특구들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규제 합리화를 만들어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광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혁신과 정책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메가(Mega) 특구를 통해 이제는 지방이 오히려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내란재판부 설치법’ 논의했지만 결론 못내

위헌소지 최소화 위해 보완·수정 의견 수렴 후 다음 의총서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권의 논란의 대상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거친 뒤 의총을 다시 한 번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



통령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자 관련 재판을 지연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독립적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가담자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에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반대 입장을 낸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사진)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

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심의마저 최소화하겠다”면서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3명, 법무부장관 3명, 판사회의 3명 추천으로 전담재판부 추천위가 구성되면 사법부 독립과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이라는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며 “결론적으로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다음 의총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했고, 그 의총을 통해 결정하기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반대 의견도 나왔냐는 질문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재판 지연, 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는 역적죄다. 일반 형사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위헌성 논란 등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발미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책의총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국민고발회 열고 ‘법 왜곡죄’ 등 쟁점법안 규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성 필리버스터 해제요건 완화 등 설명

국민의힘이 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해제요건 완화 등을 ‘공포정치·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 법이라고 규탄하는 국민고발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국회에서 ‘공포정치·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으로 분야를 나눈 국민고발회를 열고 쟁점법안들에 대한 당의 반대 논거를 펼쳤다.

구체적으로, ‘공포정치·정치보복’ 분야에선 검사·판사 등 사법 담당 공무원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적용할 경우 적용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

위를 넓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각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박형명 변호사가 다뤘다.

‘사법부 파괴’ 분야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했으며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4심제 논란을 일으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국민 입틀막’ 분야에선 오정환 전 MBC 제3노조 위원장이 전체적인 발제를 맡았고, 필리버스터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홍세욱 변호사가 각각 발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고발회에서 “민주당에선 정기국회 마지막 날,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서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

는 이 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의 이유를 두고 “첫째는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장악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씹쓸이를 함으로써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1급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본다”고 추측했다.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에 대통령 이재명의 범죄 의혹, 범죄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흑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